

민주, 日 수산물 수입 금지·피해 지원 '4법' 당론 채택

국회서 긴급의총...오염 피해 기금 설치해 추후 일본에 구상권 청구 수입 농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오염수 수산물 수입 금지 등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수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민에 대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지정은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입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물론 행정 구역 명까지 병기토록 하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새롭게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후쿠시마 연안 등 특정 지역을 원산지로서는 수산물이 아닌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넘어 일본 전역 또는 다른 국가의 수산물까지도 수입 금지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 입법안이다. 나머지 3

개 법안은 이미 발의돼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산물 수입 금지법과 관련해선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관했다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무는 완전 망각한 채 일본 심기만 살렸다"며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를 못 막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뭐냐"며 "방류를 못 막은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핵 오염수 방류 STO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일정상 불가” 檢 30일 소환 통보 거절

어제 검찰 출석 불발...“터무니없는 소설로 국가 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오는 30일에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검찰은 이 대표 측에 다음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조사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

에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고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이 대표가 다음 주 소환 조사 불응을 시사함에 따라 이를 두고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입건한 데 이어 소환을 통보한 검찰에 파상공세를 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에 ‘몰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분노를 야당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특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돈을 주

게 된 과정, 시점, 장소, 돈을 받은 사람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며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한 채 조각의 넘새만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배경에는 9월 정기국회 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당내 분열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돼 특권을 포기하겠다, 검찰이 부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검찰은 왜 꼭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하려고 하는가”며 “그 많은 (비회기) 시간을 다 소비하고 정기국회 때 굳이 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은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현수막 금지 ‘선거 180일 전→120일 전’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선거기간 25명 초과 모임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작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반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초래된 ‘정당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현재가 기존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을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소형 스피커를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고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기존 법이 헌법불합치라고 한 현재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연합뉴스

익명 산모도 신생아 출생신고 가능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서 의결 전망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

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황 입양 시스템 차명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법안명이 일부 변경됐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워밍~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동구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분할포고 및 창립총회에 갈아하는 공고

호동합업 주식회사(분할포고대상)는 2023년 7월 2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호동합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 중 장안사업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분할대상)하여 호동합업(주)에 분할(분할대상)하여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및 설립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호동합업(주)은 주식회사는 상법 제303조의 11 및 제273조에 의거 분할포고 및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아하는 바 이사회에서 결의한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공고를 통해 법안 심판의 결과를 고합니다.

- 1. 분할 방법**

구 분	신설(명)	사업부문
분할(분할대상)	호동합업 주식회사 (HYODONG MARINE SERVICE Co., Ltd.)	분할(분할대상)에 이의하지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대상)	호동합업(주)에 신설(신설) (HYODONG MSTS Co., Ltd.)	항만 하역사업
- 2. 분할 진행경과**

가. 분할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2023년 6월 27일
나. 분할을 승인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2023년 7월 20일
다. 분할(신설) : 2023년 8월 25일
라. 창립총회 개최 및 갈아하는 이사회 결의: 2023년 8월 25일
마. 설립(신설) (제정): 2023년 8월 25일
- 3.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303조의 9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하는 분할(분할대상)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분할(분할대상)의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 대상 분할(신설) 대상에 이의하지는 채무(채권)를 포함(채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 대상의 채무 중 분할(신설) 대상에 이의하지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분할(신설) 대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할(신설) 대상도 분할(신설) 대상에 이의하지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분할(신설) 대상에 이의하지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분할(신설) 대상에 이의하지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25일
호동합업(주)에 신설(신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98 (광안동)
대표이사 우 대명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1. 발전사업지
 - 발전소 용량: (유지)도상행위영향평가권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곡리 1698-7번지외 27필지(총 28필지)(14필지 1698-10, 1698-8, 1698-9, 1699, 1699-11, 1699-12, 1699-14, 1699-16, 1699-18, 1699-2, 1699-4, 1699-6, 1699-9, 1700, 1700-11, 1700-14, 1700-18, 1700-19, 1700-20, 1700-21, 1700-22, 1700-23, 1701-4/ 광장리 1614, 1614-1, 1614-6, 1614-7)
 - 발전소 면적: 418,460㎡
 - 공고기간: 2023.08.24~2023.08.31(8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40,980kW(11)
 - 사업개시예정일: 2025년 08월
 - 사업운영기간: 2026.08.01.~2046.08.31.(20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지)도상행위영향평가권 태양광발전소 사업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3.08.24~2023.08.31(8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53-8000 팩스: 02-6253-7777
 - E-Mail: help@seuleneenergy.co.kr

자산매각공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소유재산은 아래와 같이 일반경쟁 입찰매각공고 합니다.

- 아 래 -

물건소재지	토지		건물		공고번호	
	지번	지목	면적(㎡)	동수		면적(㎡)
1. 남원시 동중동 (남원병영)	344-2	대지	1,266	1개동, 주차시설	5,117.9	공고2023-1호
2. 남원시 광차동 (남원캠버스)	713 외 25필지	학교외	400,157	11개동	69,550.4	공고2023-2호
3. 아산시 송악면 평동(송악산캠버스)	347-6외 39필지	임야외	164,363	2개동	30,030.37	공고2023-3호
4. 나주시 남평읍 교촌리 외	38 외 28필지	전외	22,106	3개동 (샌드위치(포함))	9,836.7	공고2023-4호
계			587,892		114,534.37	

1. 입찰방법: 방문입찰에 한함
2. 입찰공고기간: 2023. 08. 24 ~ 2023. 09. 24.
3. 입찰서 제출 마감: 2023. 09. 25(월) 13:00 까지 (*마감까지 투찰함에 투찰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임)
- * 입찰서 제출 장소: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5. 개찰일시: 2023. 09. 25(월) 13:00 후
6. 개찰장소: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상기 세부 자세한 내용(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 현황)은 학교법인 서남학원 홈페이지 <http://www.seonambw.co.kr>를 참조 바람. **현상태 매각이므로, 매수인은 매각대상 번지 내 유치권, 지상권, 점유권 등(권원의 유무)을 물론, 이하 간단히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찰하여야 하며 유치권, 지상권, 점유권 등은 이를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2023. 08. 25.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

해산 및 청산공고(2차)

본 회사는 2023. 08. 08.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주주결의에 의거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였으나 당사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2023. 8. 25)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주식회사 에프엠씨
광양시 중마로 560 202호(중동)
청산인 조요찬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서기 2023년 07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07월 25일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채권 금액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주식회사 바이오브릭스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141 (용봉동)
청산인 이바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김원철(52019-XXXXXX)
• 최종주소: 전남 목포시 용두로10번길 25-1(용강동)
피상속인 방 김원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3-년214호로 신청하여 2023년 8월 22일 심판 결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산 및 상속재산을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위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25일
• 상속인: 1. 김경순(550301-XXXXXX) 목포시 용두로10번길 25-1(용강동)
2. 김규식(790901-XXXXXX) 목포시 용두로 7, 101동 602호 (해안동4가, 송광비치타운)
3. 김창광(850702-XXXXXX) 목포시 연산면연도1번길 111, 905동 1004호 (연산동, 골드클래스(9아파트))

• 신고기간: 2023. 8. 25 ~ 2023. 10. 31.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3. 김창광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봉선형(731013-XXXXXX)
• 최종주소: 광주 남구 덕남길 113(덕남동)
피상속인 방 봉선형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692호로 신청하여 2023년 8월 18일 심판 결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산 및 상속재산을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위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25일
• 상속인: 방복용(810701-XXXXXX) 서울 강서구 양천로 452, 에이동 602호 (동춘동)

• 신고기간: 2023. 8. 25 ~ 2023. 11. 4.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방복용의 주소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동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신 571-7658
동구	• 오 치 266-7601	• 용 북 433-1503	• 우 신 433-1503		
남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총 정 222-8171
서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철 671-7276
광산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동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말 603-0311	• 화 정 369-1625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